

출판기념회의 정치적 의례화: 한국 선거제도 환경에서 문화행사의 전략적 기능 분석

서설: 문화적 외피와 정치적 본질의 교차점

한국 정치의 역동적 지형 속에서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독특한 현상이 존재한다. 바로 유력 정치인 및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대규모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이다. 표면적으로 이 행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지적 작업물인 저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간의 사유와 철학을 공유하며, 지지자 및 독자들과 소통하는 지극히 평화롭고 문화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실제 정치적 현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순수한 문화행사로 인식하는 대중이나 언론, 심지어 정치인 본인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자, 당내외의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는 장이며, 무엇보다 선거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하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의례(political ritual)'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형적 의례화 현상은 단순히 개별 정치인들의 개인적 선호나 일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구성하고 있는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허점을 내포한 규제 환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¹ 이는 역설적으로 선거일 90일 이전의 시점, 즉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으로 대규모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합법적 통로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본 분석은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저술 행위를 넘어 한국 정치 특유의 굳건한 정치적 의례로 제도화된 과정과 그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전환 이론을 비롯한 다각적인 이론적 렌즈를 활용하여, 저술이라는 문화적 형식이 어떻게 권력과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자본으로 치환되는지 추적한다. 나아가 현행 선거 규제 체계가 이러한 형식을 어떻게 방조하고 오히려 전략적 우위를 부여해 왔는지 법제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여타 문화행사(공연, 포럼, 전시회 등)와의 비교를 통해 출판기념회가 지니는 독보적인 정치적 효용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존의 선거 전략 연구를 문화정치학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선거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문화행사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렌즈: 상징자본, 수행적 의례, 그리고 제도적

합리성

한국 정치에서 출판기념회가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시각을 넘어 다차원적인 이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본 분석은 자본의 전환, 의례의 수행성, 그리고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론 축을 교차하여 출판기념회의 구조적 본질을 해부한다.

정치사회학적 자본 전환: 문화자본에서 상징자본으로의 연금술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본의 형태를 변환하며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이다.² 부르디외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계층화와 권력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부(경제자본)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문화적 취향과 지식(문화자본),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사회자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정당성과 명예로 승인받는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으로 귀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과 학력, 문화적 소양은 전통적으로 엘리트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인이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문화자본의 축적 과정이다. 단행본이라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해당 정치인은 단순한 권력 추구자를 넘어 전문적 식견과 국정 운영의 철학을 겸비한 '지식인'이자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책의 출간만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완성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라는 물리적 공간은 이 책(문화자본)을 매개로 하여, 지지자들의 후원금(경제자본)과 당내 유력 인사들의 축하 및 연대(사회자본)를 한곳에 집결시키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한다. 행사장 입구에 길게 늘어선 축하 화환의 개수, 단상에 오르는 유력 정치인들의 무게감, 그리고 행사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메운 군중의 규모는 그 정치인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동원력을 시각적으로 입증한다. 이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통해, 본래 문화적 창작물이었던 책은 철저히 탈맥락화되고, 오직 정치인의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상징자본' 및 '정치자본'으로 폭발적으로 전환된다. 즉, 출판기념회는 문화자본을 투입하여 막대한 정치적 상징자본을 산출하는 고효율의 연금술적 장치인 것이다.

정치적 의례 이론: 수행성(Performance)과 무대의 정치학

두 번째 이론적 축은 인류학 및 정치학에서 다루는 '정치적 의례(political ritual)'와 '수행성(performance)'의 개념이다. 정치적 행위는 단순히 합리적 논변과 정책의 대결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감정과 무의식을 자극하는 고도로 양식화된 상징적 공연을 통해 완성된다. 출판기념회는 철저히 계산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적 무대와 같다. 이 무대는 일상적인 공간을 일시적으로 신성하고 권위 있는 '리미널(liminal)'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행사장의 조명, 현수막의 크기 및 배치, 참석자들의 좌석 배열, 그리고贵宾(VIP)들이 입장할 때 터져 나오는 박수와 환호는 모두 주최자인 정치인을 서사의 중심에 놓기 위한 치밀한 무대 장치이다. 특히 '축사 네트워크'는 이 의례의 핵심 하이라이트다. 당대표, 원내대표, 혹은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주최자를 치켜세우는 발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당내 계파의 역학 관계와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무게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인증(certification)'의 의례이다.

언론 매체는 이러한 무대를 관찰하고 재현함으로써 의례의 효과를 행사장 밖의 대중에게로 무한히 확장한다. 정치인의 사소한 제스처 하나, 축사에서 언급된 은유적 표현 하나하나가 정치적 기호로 해독되어 기사화되며³, 이 과정을 통해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여의도 정가를 뒤흔드는 강력한 '정치 선언'으로 격상된다.

제도적 합리성: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효용 극대화의 전략

세 번째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합리성(institutional rationality)' 이론은 정치행위자들이 왜 수많은 전략적 선택지 중에서 유독 출판기념회에 집착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행위자들은 주어진 제도의 틀 내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비용과 법적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효용(리턴)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계산을 수행한다. 한국의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역시 모금의 주체, 시기, 한도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 제도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선거에 필요한 실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틈새(loophole)'를 필사적으로 탐색한다. 출판기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 및 표현의 자유'라는 강력한 기본권적 방패막이 뒤에 숨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적 피난처를 제공한다. 정치행위자의 입장에서 출판기념회는 선거 전 정치적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 타율이 높은 전술적 무기인 셈이다.

규제 구조의 역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

가설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선거 규제 구조는 출판기념회의 정치적 의례화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해 온 주범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조항들이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어떻게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지에 대한 꼼꼼한 법제 분석이 요구된다.

정치자금법의 맹점: '책값'이라는 이름의 음성적 자금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멈추지 못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의 편의성에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령 체계 내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¹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나 선거 후보자가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창구로 '후원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금 한도액, 기부자의 신원 확인, 투명한 회계 보고 의무가 엄격하게 뒤따른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의 책 판매는 기본적으로 저자와 독자 간의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간주된다.¹ 이러한 법적 성격 규정은

규제의 완전한 진공 상태를 초래한다.

1. **신고 및 보고 의무의 부재:** 출판기념회를 통한 총수입과 지출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전혀 없다.¹ 아무리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이를 공개할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된다.
2. **모금 한도의 무제한성:**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건네는 봉투의 액수에는 상한선이 없다. 정가가 2만 원인 책 한 권을 사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제재하거나 추적할 근거가 희박하다.¹
3. **단속 권한의 한계:**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 여부나 기간 위반 등은 단속할 수 있지만,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도서 금액 명목으로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살피거나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 선관위 관계자조차 개인이 몇 억 원을 책값으로 후원해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규정된 바가 없어 따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¹

이러한 규제 공백은 출판기념회를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창구이자 대가성 뇌물이 오가는 '검은 돈'의 세탁소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유력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인허가권을 바라는 지역 토건업자나 이권 단체들이 앞다투어 고액의 봉투를 내밀며 줄을 서는 현상이 공공연한 비밀로 굳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 규제와 그 한계

그렇다고 해서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가 명시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기와 장소 행위 양태에 대해 몇 가지 규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다.¹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규제 대상 범위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제한되는 행위 세부 내용	규제의 본질적 목적
기간 제한	선출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개최 전면 금지. ¹ (예: 특정 선거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적용 등)	선거 직전의 막바지 여론 호도 방지 및 사전 선거운동 원천 차단
장소 및 시설물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 저서 판매 금지. ¹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입후보 지역 거리에 행사 안내 현수막 게시 금지. ¹	선거 운동 전용 공간의 상업적 이용 금지 및 불법 시설물을 통한 인지도 상승 차단

기부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일체 금지.¹ -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하거나 할인가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¹ 	유권자 매수 행위 방지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에 따른 통상적 기부행위 엄단
행사 내용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서의 본문 내용과 무관하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개인적 업적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금지.¹ - 전문 예술인을 초청하여 무상으로 전문 공연(성악, 마술, 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¹ 	노골적 선거 캠페인 방지 및 공연 관람이라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기부행위) 제공 금지

표에서 나타나듯, 공직선거법은 행사의 외형적 조건들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은 가장 강력한 강제 규범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선거일 90일 이전이라면 지역구민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책값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며, 유력 인사들의 축사를 통해 세를 과시하는 행위 자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면죄부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제값에 책을 팔기만 한다면, 그 이면에서 교환되는 수천만 원의 격려금과 무대 위에서 오가는 맹렬한 정치적 선동은 법망을 유유히 비껴가게 된다. 실효성 없는 미시적 조항들이 오히려 거대한 정치적 의례의 합법성을 수호해 주는 방패로 기능하는 셈이다.¹

실증 분석: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담론과 판례

정치행위자들이 이러한 규제의 틈새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유하고 담론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과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프레임 담론 분석: 탈색된 문화, 채색된 정치

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행위와 이데올로기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며 그 의미가 고착화된다.³ 출판기념회에 대한 언론 매체의 텍스트 분석 및 담론 분석 결과, 언론은 출판기념회를 '신간 도서의 출간을 알리는 정보 전달'의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언론은 이를 '정치적 이벤트'로 철저히 번역하여 독자에게 제공한다. 기사의 제목과 본문 프레임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띤다. 첫째, '세 과시' 프레임이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숫자, 동원된 지지자들의 인파 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삿거리로 다뤄진다. 둘째, '출정식' 혹은 '출마 선언' 프레임이다. 언론은 주최자가 마이크를 잡고 던진 발언 중 정책 비판이나 향후 정치적 포부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이것이 사실상의 선거 출마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독해 낸다. 셋째, '계파 결집' 프레임이다. 특정 당내 계파의 좌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얼마나 참석하여 축사를 했는지를 분석하며, 당내 권력 투쟁의 지형도를 그려낸다.⁴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 형성 과정은 출판기념회의 상징자본을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다. 주최자(정치인)는 "단지 책을 내어 소통하려 했을 뿐"이라는 문화행사로서의 형식적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사전 선거운동의 법적 뒷을 피한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정치적 해석과 프레임 보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드는 광고 없이도 선거판에서의 정치적 가시성을 전국적 규모로 확보하는 고효율의 전략을 달성하게 된다.

판례와 한계 사례 분석: 신학용과 노영민의 딜레마

출판기념회가 내포한 법적 불안정성과 제도적 모순은 구체적인 판례와 사건 속에서 극명하게 노출된다. 이 공간은 합법과 불법이 가장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는 지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악용 사례는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뇌물수수 판례다.¹ 그는 2013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3,36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문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금액이 '책값' 내지는 정당한 출판기념회 축하금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차용했을지라도, 금품 제공자의 신분, 직무관련성, 그리고 입법 활동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수수라고 판시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¹ 이 판례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리딩 케이스다.

반면, 투명성을 확보하려다 오히려 도덕적·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정반대의 사례도 존재한다. 2015년 노영민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이 발간한 시집을 판매하였다.¹ 음성적인 현금 봉투가 오가는 관행을 타파하고 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과는 거센 역풍이었다. 피감기관이나 다른 없는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책을 강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정치권 일각이나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양성화한 노영민 의원의 방식이 현금을 챙기는 다른 정치인들보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었다는 씩씩한 재평가가 나오기도 한다.¹ 이 두 사례는 현행 규제 시스템이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웅변한다. 투명하게 흔적을 남기려 노력하면 도덕적 십자포화를 맞고, 흔적 없이 거액의 현금 봉투를 수령하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사통과하는 비합리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타 문화행사와의 전략적 비대칭성: 포럼, 콘서트, 전시회의

한계

가설 1에서 언급한 출판기념회의 '저위험·고효율' 전략성은 여타의 문화적 형식들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정치인들은 책 출판 외에도 정책 포럼, 유료 토크콘서트, 사진 및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기획을 시도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행사들은 출판기념회에 비해 극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 공연 및 전시행사의 엄격한 기부행위 규제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진전, 서예전 등의 전시회나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행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효용'이다.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법은 선거 예비출마자가 주최하는 각종 지역 행사 등에서 전문 예술인(성악가, 마술사, 댄서 등)을 초청하여 대중에게 무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¹

이는 유권자에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⁶ 즉, 정치인이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볼거리를 기획하는 순간, 즉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출판기념회는 책이라는 실물 상품이 매개되므로 관람객이 아니라 '구매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며, 저자의 인사말이나 지인들의 축하만으로도 행사가 성립되므로 굳이 전문 공연을 동원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유료 토크콘서트의 이중 구속: 한동훈 사례 분석

최근 정치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유료 토크콘서트'의 사례는 출판기념회의 특권적 지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대비시켜 보여준다. 2026년 2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이름을 내건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좌석 등급에 따라 티켓 가격을 차등적으로 책정하여 판매하였다.⁷ 이는 서구 정치 캠페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펀드레이징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적 법제 환경에서는 극심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 맹비난하며, "콘서트가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날카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⁷ 법률 전문가들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4. **흑자의 딜레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정치인이 유료 행사를 열어 티켓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일반 상거래에 속한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발생한 잉여 수익금이 향후 해당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정의하는 '정치자금(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범주에 포섭될 여지가 매우 높다.⁷ 적법한 후원회 모금 한도를 벗어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5. **적자의 딜레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반대로 행사에 투입된 막대한 대관료와 무대

설치비 등에 비해 티켓 가격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적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 정치인이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행사 원가와 티켓 가격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제공한 셈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엄격히 금지하는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⁶

이처럼 유료 토크콘서트나 여타 문화행사는 흑자가 나도 불법, 적자가 나도 불법의 경계에 서게 되는 가혹한 '이중 구속(double bind)' 상황에 놓인다. 오직 출판기념회만이 "책을 팔아서 남긴 이윤은 출판사나 저자의 개인적 영업 이익"이라는 해묵은 관행적 해석 덕분에 이러한 이중 구속에서 완벽하게 탈출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 행위자들이 다른 참신한 문화적 기획을 포기하고, 천편일률적인 출판기념회라는 의례의 제단으로 반복해서 모여드는 결정적 이유다.

정책적 함의: 선거 제도 개혁과 문화행사의 재포지셔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개인의 저술 활동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막대한 상징자본과 음성적 정치자금을 창출해 내는 고도의 전략적 기획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필연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문화의 외피를 쓴 변칙적 정치 행위를 규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응전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안과 그 의미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출판기념회의 폐해를 직시하고 강도 높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⁸ 10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⁸ 선관위가 제시한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개선 분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입법 취지
모금 행위 전면 금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 개최 시,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定價)'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축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 모금을 금지함. ⁸	책값으로 위장된 후원금 수수 관행의 원천적 차단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처벌 규정의 신설	정가 매매 행위를 벗어나, 저서 출간 기념 및 축하 명목으로 축하 금품을 모금하거나 역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처벌 조항 마련. ⁸	실효성 없는 행위 제한을 넘어, 금품 수수 자체를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편입하여 억지력 확보
사전 신고제 도입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정치인은 개최일 전 2일까지 행사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⁸	음성적으로 치러지던 행사를 선관위의 공식적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체계 하로 편입

이 개정안의 철학적 기초는 명확하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출판의 자유, 그리고 통상적인 영업권(상행위)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행사의 개최와 도서 정가 판매 자체는 전면 허용하되⁸, 정치자금법이 허용한 합법적 방법 외의 편법적인 자금 모금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⁸

흥미로운 대목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대안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식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주최하도록 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게 하자"는 식의 양성화 의견도 강력히 제시되었다.⁸ 이 방식은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투명한 기금 모금 행사(fund-raising dinner)와 유사한 형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최종 채택하지 않았다.⁸ 이는 출판기념회라는 상업적·문화적 행위와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 절연시키겠다는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혁의 교착 상태와 근본적 대안의 모색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규제 공백을 정조준한 합리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막대한 현실 정치적 장벽이 존재한다. 정치권 내부에서 현직 지자체장이나 선출직 인사들의 출판기념회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은 팽배해 있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통과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¹ 스스로의 정치 자금줄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셀프 개혁' 입법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집단적 저항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이고 우회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정가 판매 의무화 제안에 더하여, 결제 방식의 양성화가 강력히 요구된다. 현금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 결제만을 의무화하여 현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¹ 만약 이것이 상거래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는다면, 차선책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도서 판매 수익 중 제작 실비 및 통상적 영업 이윤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법적으로 의제(擬制)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판매 수익 전액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을 철저히 보고하게 하고⁵, 사용처를 공적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축재나 편법 상속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¹

선관위 역시 출판기념회 모금 금지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 및 기부 주체의 다양화 등 전반적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⁸ 숨통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으므로, 음성의 돈을 양성화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 펀딩 시장을 열어주는 거시적 제도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결론: 문화의 정치화와 새로운 선거 규제 패러다임의 요청

본 연구가 수행한 다각적인 분석은 한국의 선거 환경에서 출판기념회가 지니는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출판기념회는 결코 무해하고 순수한 지적 담론의 장이 아니다. 그것은 피에르 부르디외가 통찰했듯, 책이라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동원하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모음으로써 정치인의 권위와 동원력을 증명하는 고도로 효율적인 '상징자본' 생산 기지이다. 나아가, 고도로 연출된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특정 계파의 연대를 확인하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공표하는 치밀한 무대 장치이자 수행적 의례이다.

이러한 기형적 의례가 정치 시즌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책무는 규제 체계의 모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거래의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¹, 무제한의 '검은 돈' 모금을 묵인해 왔다. 타 문화행사(콘서트,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맞닥뜨리는 기부행위 및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중 구속의 딜레마와 비교할 때⁶, 출판기념회는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전무하면서도 정치적·경제적 리턴은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선거 전략 연구가 간과해 온 '문화적 형식의 정치적 도구화' 현상을 정밀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크다. 정치 행위자들은 억압적인 법제 환경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의 빈틈을 찾아내어 문화라는 방패 뒤에서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기획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정책 당국과 입법부는 더 이상 "출판과 집회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출판기념회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편법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정가 판매 의무화 및 모금 전면 금지 조항의 조속한 입법화는 선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⁸ 나아가 문화행사라는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동원력을 '정치적 자본의 형성 과정'으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이를 통제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 제도는 일상의 문화적 형식 속에 따리를 틈 은밀한 특권의 구조를 직시하고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6. [기획] '뇌물 창구' 전락한 시장·군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가 답 - Daum,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60208162415994?f=p>
7. 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d8d153199b197de7ecd42904f0c5d65
8. 정치인 홈페이지 프레임 분석 : 정당과 성별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

- DBpia,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57686>
9. 신문의 뉴스프레임과 정치인 발언 보도태도 연구-미디어법 이슈를 중심으로 | DBpia,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75102>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023/detailRP>
11. 출판기념회 무상공연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후보·공연자·유권자 모두 주의해야 - Daum,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60223151005256?f=p>
12. 정치인 유료 토크콘서트, 위법이다? - 단비뉴스,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20>
13. 알림·소식 | 위원회소식 | 알림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 4, 2026에 액세스,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84&bcIdx=612>